

與, 법사위서 검찰-사법부 맹공 “한명숙 판결, 수사과정 문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수사 사례 등을 들어 사법부와 검찰을 모두 정조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당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문제 삼았다. 박병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공판중심주의’는

백혜련 “제왕적 대법원장·법원행정처 개혁 사법개혁 가장 큰 핵심”

조재연 행정처장 “개혁 미흡 동의...법관 독립 못지않게 책임 중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다. 공판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이 “미흡하다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판례를 들어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 원칙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주요 증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반복했으나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송기현 의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자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사례를 들어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임모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위헌적 행위가 판단된다는 표현이 담겼다.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정직’이다. 정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한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은 제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었던 곳이고, 대부분 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간사)도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논의로 사법 개혁은 뒤로 밀린 형국”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 문제나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사법행정처문제의 ‘개혁’ 역할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자문 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장에 우호적인 법관이 다수인 구조에서 제 역할을 하겠나”고 우려했다. 이에 조 처장은 “(사법개혁은) 많이 미흡하다”며 “법관의 독립 못지않게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동근 의원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 타당성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검토 여지는 있지만 아동학대 판단 범위가 넓어 최저형을 10년으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홍걸 측 유산상속 분쟁에 “이희호 유지 받들려 최선”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동교동 자택, 공동상속 법적 불가”



고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고인의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곳을 보여 앉아 있다.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김 이사장은 대리인을 통해 동교동 자택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은 절차가 복잡해달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안내하는 동시에 사회 원로와 민주화 동지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문제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김 이사장은 애초의 다짐과 달리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공동상속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다. 또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총선을 앞둔 4월1일 내용증명을 보내 4월6일까지 상속 재산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께 알려겠다고 했다”며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고 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빚어진 유산 상속 분쟁에 대해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문무 소속 조순열·김정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밝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소병철)는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둔 가운데 22일 순천시의원 총회를 열어 당내 경선을 갖고 허유인(3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박계수(재선)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허유인 의원은 경선에서 강형구 의원(각 3선)과 함께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되었고, 박계수 의원은 장숙희 의원(각 재선)과 경합하여 민주당 후반기 순천시의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최다선(3선) 우선 원칙으로 입후보한 두 의장 후보는 경선 후보

에 등록하며 공명경선에 서약해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였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을 준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한 민주당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박계수 의원은 지역구가 해룡(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어서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 분구로 상처를 입은 해룡면이 소외되지 않게 순천시의회 운영의 한 축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경선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번의 의장 후보로 선출된 허유인 후보는 “앞으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존중하고,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집행부를 내실 있게 견제하는 순천시의회가 될



허유인 박계수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민주적 경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순천 시민들의 뜻을 잘 담아내는 순천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김두관 “18대 0도 각오해야...통합당 빼고 가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내 원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미래통합당을 빼고 가자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상황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도 문제지만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은 390만 국민의 생

존이 달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일 안하고 발목 잡는 미통합당을 심판하고 미통합당이 뭉치를 부리더라도 할 일은 하라고 177억을 줬다”며 “우리가 또 다시 미통합당의 발목잡기에 굴복해 할 일을 못한다면 이는 총선 민심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주까지 미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에 불응한다면 18대도 불사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